

충남리포트 제145호

ChungNam Report

2014. 12. 10.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 태 규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tgsung@c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에서 인권행정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인권취약계층별로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데에 있음

요 약

- 인권은 중앙정부의 행정사항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방정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음. 2013년 9월 제24차 UN인권이사회는 '지방 정부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UN이 인권문제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권행정이 중요하게 됨
- 지방에서의 인권행정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과거 독재시대 민주적 권리 중심의 기본적 인권에서 지금은 생활 중심의 생활권까지 인권의 관심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신자유주의 확대로 인하여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외되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인권행정은 인권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적인 삶'에 대한 조건과 범위가 달라짐. 인식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의식이 더 중요함. 이런 인식은 지방행정기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 인권행정을 위해서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충남에서는 도청 차원에서 인권조례와 인권선언문이 제정되었지만, 시군차원에서는 아직 시작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지방인권행정에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활동경험을 보유한 인권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인권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

CONTENTS

〈요 약〉

1. 왜 인권인가?
2.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행정
3. 충남 인권의식 실태 및 과제
4. 충남 인권취약계층별 개선 과제
5. 시사점

● 충남은 역사적으로 차별수탈에 대한 높은 저항의식을 보유하고 있음.

- 고려 명종 때에는 향·소·부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에 대해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공주 명학소의 봉기가(1176년) 있었으며, 임진왜란 시기에는 국가의 수탈에 대해 송유진의 봉기(1594년), 이몽학의 봉기가(1594년) 일어남. 조선 후기에는 삼정문란과 부농에 의한 수탈에 대한 농민항쟁이 전개되었으며, 인간평등의 인권가치를 수호하고자 1894년 동학항쟁시기에는 예산·태안·당진·천안·홍성·서산·금산·공주 등지에서 농민군이 항쟁하였음

● 충남은 인간평등의 종교적 가치가 전파된 지역임.

- 내포지역은 신유박해(1801년), 청양·덕산박해(1813년), 병인박해(1866년) 등을 통해 신봉적 불평등을 초월한 인류애의 가치를 죽음으로 간직하였음. 충남지역은 또한 독재의 현대사 시기에도 민주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 표출됨

● 1980년대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방향은 국가권력에 대한 항쟁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확대되었음.

- 경제발전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새로워졌고,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양극화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외국 이주민과 독거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도 증가일로에 있음. FTA확대로 인해 농·어업인의 생활권도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모든 주민의 공동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이제 인권은 민주화 차원을 넘어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도정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행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 인권국이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검·경찰조직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인권의 범위를 ‘인간 대 인간’의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인권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검·경찰이 도청, 시·군청의 조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인권은 더 넓게 개념화되어야 함. 또한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기관이 교육자치제라는 이름으로 일반 행정기관과 유리되어 있음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 “발전”, “삶의 질” 등의 개념으로 행정목표를 세우고 있음. 지자체의 발전, 행복은 사회·경제적인 총량의 절대적 증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 지역의 발전이 구성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관계와 조건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인권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 인권은 복지, 환경, 경제, 교육, 주거 등 인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지자체도 지금까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행정에서 인권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을 다른 각도에서 보완하자는 것임.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지상주의, 발전·개발 우선주의 등 물량적 측면에서 많은 강조점을 두었음. 무엇이든 최고, 최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주된 관심사도 양적 성장에 있었음. 이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중요시되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 인권행정의 주된 목표가 될 것임

- 2013년 9월 제24차 UN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이는 광주광역시가 ‘광주 인권도시 원칙’을 만들었고, 이를 한국정부가 UN에 상정하여 UN인권이사회 의제로 채택된 것임. 지금까지 UN은 인권문제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강조하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공식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UN의 결의안은 의의를 지님

● 국내 인권도시

- 인권도시 규범으로 광주광역시는 인권헌장을 제정하였고, 인권조례 역시 2007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13곳의 광역 시도, 48곳의 기초지자체가 제정하고 있음
- 집행기구로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였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인권팀을, 광주 동구가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였음. 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광역차원에서는 충남을 비롯한 5개 시도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권 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이외 인권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수립하였고, 충남을 비롯한 4개 광역시도가 수립 중에 있음

● 해외 인권도시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방식으로 도시와 지역차원의 인권향상을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고, 국제 시민사회 역시 인권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운동과 인권 관련 NGO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개념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도시 및 지방정부 사이의 네트워크와 연합들은 인권을 주요의제 및 행동계획에 포함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유엔 헤비타드가 주관하는 ‘세계도시포럼’,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인종차별반대도시국제연합’,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세계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2011. 4)’ 및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세계헌장(2005. 9)’은 대표적인 인권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임

-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 경찰학교, 지역 인권비서, 옴부즈만 사무실 등 12개 조직과 여러 개인이 참여해 인권도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아래 지역 전체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남부의 인구 27만 명의 문화도시로 유럽 최초의 인권도시로 공표되었고, 2001년 시의회는 인권도시 선언을 통해 그라츠를 인권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인권 관련 내용을 연방 및 주·시헌법에 담아, 시민들의 인권침해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충남 도민은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일반적 인권의식을 전국 차원과 충청남도 차원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충청남도민은 전국 및 충남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충청남도민은 충남의 인권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인권상황을 묻는 질문에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남의 상황은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충청남도민은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이 가능함.
 - 충청남도민은 인권정책 중 필요한 것은 인권약자의 보호,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의 보장으로 꼽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차원의 인권 증진 제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민은 인권취약계층에 대해 일상, 경제,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함.
 - 인권침해 원인으로는 사회권적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계층과 양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침해 원인으로는 경제력, 학력, 성별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천, 계층,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증진방안이 요구됨.

-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무대응이 가장 많았으며, 당사자와의 직접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무대응이 많은 원인은 의지의 부족보다는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것이므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1) 본 글은 『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충청남도, 2013)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였음.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 걸쳐 일상, 경제, 복지, 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

- 도민은 노인들이 일상생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 영역, 교육과 사회참여 등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 어려움, 구직 활동 어려움, 일상의 고독, 여가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구직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는 다시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충남 청소년들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과 학습강요, 부당한 임금 등 청소년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고, 이것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필요함

● 충남의 장애인은 이동편의시설 등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취업이 매우 어렵고, 취업할 경우에도 임금차별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용, 제한된 교육권, 편의시설 부족, 투표의 어려움으로 인한 참정권의 제한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이주민도 편견과 문화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외모·국적에 의한 편견, 구직의 어려움, 직장내 승진·임금 차별, 사회 적응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자녀에 대한 차별, 의사결정에서의 소외 등을 경험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이들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인권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높고,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도 높음.

-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따라서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의 형태, 주체, 상황, 대상을 구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상황과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충남이 실행하고 있는 인권증진제도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충남의 행정에서 부족한 점은 공무원 마인드, 제도 미비, 도민인권意識 등의 문제가 있음. 인권행정은 충청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행정 제도의 정비와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 도 내외의 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

1. 아동·청소년

-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인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함.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회복/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함.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함. 학업중단/이탈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진로교육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지원해야 함

2. 장애인

-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접근권(편의 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더 소외된 장애인 중심으로 보완하여야 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장애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장애인의 주거권을 증진해야 하며, 병원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도 개선되어야 함.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노동권을 보장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문화·예술·체육·여가에 대한 향유권을 개선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도 요구됨.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예

방조치도 확대되어야 함. 탈시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자립생활센터를 활성화하고,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 등의 지원이 요구됨

3. 노인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다인공동시설에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매뉴얼과 지도가 필요하며, 시설요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건강문제, 정서문제, 경제문제, 자녀와의 소통문제 등 각종 노인상담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함
- 노인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되어야 함.
 - 증가하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에 대한 종합적 문제의 시각으로 노인인권문제를 접근하여 노인의 기본적 인권선을 보장해야 함. 노인의 여가활동을 다양화하여 고독으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안정된 생활권을 증진해야 함

4. 여성

-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됨. 성평등 인식이 생활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정책결정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어야 함.
 - 모든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피해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개인 및 가족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중요함. 재발방지와 함께 가해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함

● 여성소수자 정책을 강화해야 함.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성수자 등 여성소수자의 보건·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을 높여야 함. 여성을 경제참여권을 신장해야 함. 취약계층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양육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경영권·재산권·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가 제고되어야 함

5. 이주민

●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입국 전후의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입국 후 사회적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체불임금, 결혼이주여성 등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 공장노동자 농어촌지역 노동자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기본적 주거권 이외에 안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언어폭력, 인종차별,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이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 언어소통의 문제로 병원치료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며, 특히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체류 안정성과 노동권도 신장되어야 함. 이주여성의 비자문제,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경우 등 체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과 더불어 절차간소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6. 농업인

- 농업인의 인권제고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워져야 함.
 - 농업이 담당하는 먹거리, 문화, 환경,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다기능 농업’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 도시와 대비되는 농업인의 표준적 삶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도시인과의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 대한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함.
 - 특히 농촌의 복지문제는 도시와는 달리 과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주민의 노령화로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나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 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장기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참여가 필요함.
 - 농촌의 환경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예산군 꺾곡리, 청양군 강정리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보존체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개발행위 과정에서 농민 참여가 필요하며, 개발에 관한 정보공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향토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존 및 유지, 발전체계도 구비되어야 함.
 - 농촌지역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는 농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존, 유지, 발전 방안이 필요함. 지역의 향토(전통)음식, 전통음악, 전통(민중)의학은 시군단위 행정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하여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대농 위주의 정부정책에서 소농들이 토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도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많은 기관에서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

으나, 농민들은 정보를 몰라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 주된 원인은 정부정책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농산물 가격 및 보상체계에서 농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도시소비자 위주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결정체계에서 늘 배제됨

-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산물과 재산피해에 관한 보상체계 역시 도시소비자에 비해 농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상가격은 대부분 농민의 기대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수매가 등 농산물가격 결정 시 농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계상 시에도 농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7. 어업인

- 어업인의 인권인식이 높아져야 함.
 - 어업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권을 교육을 통하여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어업분야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함. 어촌의 증가하는 고령 어업인의 주거권을 개선하고, 의료사각지대인 연안 오지어촌 주민들의 건강권을 증진해야 함. 어업인 자녀들의 교육권 뿐만 아니라 어촌 전 주민에 대한 인권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함. 어촌의 공간과 시설부족으로 문화, 여가, 예술, 체육활동이 제약되는 바, 이들의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매년 바다를 통하여 쓰레기가 연안 및 도서 어촌계로 밀려오는 등 어촌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

● 인권관점의 확대

- 과거 권위주의시대 인권은 민주화를 위한 자유권의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 등으로 인권의 영역을 확대되었음.
- 양적 경제성장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제고됨
- 양극화, FTA 확대, 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에 단일 국가의 문제로 국한된 인권이슈가 국제적 이슈로 확대되었음

● 지방행정에서의 인권적 관점 정비

- 인권은 중앙정부,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 행정은 등한시되어 왔음.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삶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가장 정확히 그 문제점이 파악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행정의 주된 행정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인권을 위한 제도 정비

- 현장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인권의식 개선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지역인권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성 태 규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041-840-1270, tgsung@cdi.re.kr

※ 본 연구는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4)」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 참고 자료 ◆

김선희·전영평,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권 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김수철, “인권과 기본권의 근본으로서의 인간존엄성(상)”, 『사법행정』, 39권 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백동주, “인권선언의 역사 - 사회권”, 『사법행정』, 30권 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이경후·이상구, “다문화인의 인권과 정상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0권 0호, 한국행정사학회, 2012.

이종열, “문화복지의 인권적 접근”, 『한국행정포럼』, 137권 0호, 한국행정학회, 2012.

카츠히꼬 마스모토, “세계화시대의 공익과 인권 ; 공공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 『영남법학』, 24권 0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농산물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흥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헌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과 중국 하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